

올림픽특구 내년 상반기 중 지정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이 내년 6월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또 동계 올림픽 경기장에 1,304억원, 진입도로에 886억원이 투입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도 동계올림픽추진단은 19일 올림픽 배후도시 기능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특구 지정을 완료, 개발여건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민자유치 대상 등을 선정하는 등 특구 지정과 함께 개발사업이 시작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특구 지정 원칙을 대회 성공 개최와 대회시설 활용 촉진, 지

민자유치 개발도 본격화 경기장 예산 내년부터 투입

역발전사업 추진 가능성, 각종 개발규제지역 제외, 주민불편 최소화 지역 등으로 정했다.

또 특구 선정 기준은 대회 관련 시설 등과의 접근성, 산업입지 적정성 및 투자유치 가능성, 문화·관광자원 보유 및 발전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현황, 정주환경 등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는 내년부터 예산이 본격 투입된다. 내년 사업비는 알파인 경기장 254억원,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

장 224억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271억원,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218억원, 아이스하키 제1경기장 185억원, 아이스하키 제2경기장 152억원 등이다.

경기장 진입로는 지방도 456호선 진부~횡계IC 구간에 107억원, 지방도 408호선 면온IC~보광휘닉스파크 구간 179억원, 평창 유천~수하 간 군도 114억원, 진부역 진입도로에 139억원 등이 투자된다.

도는 동계스포츠를 전 국민의 생활체육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원주강릉전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건설협회 도회, 철도시설공단에 건의... 지분율 상향 조정 등 요청

도내 건설업체가 원주~강릉 복선전철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정동기)는 19일 오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 발주 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6개 공구에 대한 도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참여 지분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이날 도회는 일반입찰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이 10%에 불과해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참여 지분율을 10%

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 업체를 기존 1개사에서 2개사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대로라면 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일반건설업체는 6개 공구에 각 1개 업체씩만 참여할 수 있어 도 전체 500여개 회사가운데 일부만 수혜를 받기 때문이다.

또 이미 발주한 상반기 5개 공구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3개 공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최소 지분율이 5%에 불과한데다 도내의 경우 부계약자의 시공

능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입찰 확대를 요구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자의 지위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적정비율(82% 이상) 명시 등을 강도 높게 건의하고 있다.

정동기 회장은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와 민간내수 경기침체로 수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공사는 대부분 대형으로 발주돼 중소기업은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올 하반기 6개 공구 발주 시에는 지분율 확대와 분리발주 등

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측은 지역업체 지분율 확대는 규정이 있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지역업체 참여확대는 입찰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 6개 공구와 관련, 연말 착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협의 및 설계금액 산출을 거쳐 조만간 공고를 낼 계획이다. 현재 6개 공구의 총사업비는 2조 8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